

더민주 전북도당 총선 패인 분석

적극 지지해온 도민들 믿고 안이하게 대처· 뒤늦은 후보 전략공천 등 꼽아

제20대 4·13 총선에서 10개 선거구 중 8개 지역구를 내 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총격을 추스르며 패인 분석에 골몰하고 있다.

당초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던 후보마저 낙선하자 근본적인 원인 찾기에 나선 것이다.

선거 초반까지만 해도 '설마 했지만 이번 대패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의 체격을 달게 받겠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당은 이번 선거 주요 패인으로 그동안 적극 지지해온 도민들을 믿고

안이하게 대처한 점을 꼽았다.

또 소지역주의, 문재인 대표 사퇴와 김종인 셀프공천에 따른 도민 민심 반발, 뒤늦은 후보 전략공천 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도당은 이같은 패배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민심을 다시 잡는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지역주의 대비책을 수립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차기 선거에서 이를 적극 반영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인물론'이 우

선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신뢰도 하락 골이 깊기 때문에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당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평가와 지역 당협위원장 등의 역할에 따라 도내 민심도 얼마든지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정치내 입지가 좁아진 것은 물론 존재감이 크게 축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당 역시 영남권(분산 5명, 김해 2명, 대구 1명)에 비해 당선인을 적게 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눈치다.

국민의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뿐 아니라 이들의 탈당 및 국민의당 입당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도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위상 확립 등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광영기자)

도의회 22일까지 임시회 개최

전북도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제33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각종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와 상임위원회별 현지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회기 중 5분 자유발언은 장명식(고창2), 양용모(전주8), 최인정(군산3), 이해숙(전주5), 양성빈(장수), 김대중(익산), 백경태(무주) 의원이 나선다.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북도 이북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4건(조례안 18, 동의안 14, 규칙안 2)을 심사한다.

(신광영기자)



치안행정협의회 정기회의

15일 전북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김재원전북지방경찰청장 및 전북치안행정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상반기 치안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도,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

15일 전북도는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영구·50년 임대주택 중 15년이 경과한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업의 대상은 군산 산복근로자, 김제 시영, 익산 청아 근로자 아파트 등으로 13개 단지 1만1천여 가구로 총 34억원을 들여 시설개선을 한다.

주요 개선 시설로는 발코니시등 세대내부 환경과 CCTV성능, 세대출입 방해물 주차충돌등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시설 등이 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비확보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도, '우즈벡 농기계 R&D센터 조성' 공모 선정

농기계업체 수출활성화·농생명산업 활력기대

전북도가 15일 올해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사업인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내 농기계업체의 수출활성화와 농생명산업의 활력이 기대된다.

이번에 공모·선정된 사업은 '공적개발원조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으로 정부가 개도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기자재·기술협력·컨설팅 등을 제공하면서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농업의 비중이 20% 이상이지만 면화수확에 필요한 농기계와 노동인력이 부족해 2014년 6월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교섭을 계기로 '농기계 R&D센터 조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조를 공식 요청(2014년 12월)한 바 있다.

현재 도는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 농기계 관련 풍부한 인프라를 토대로 농생명 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중으로 '농기계 신뢰성시험센터*(김제)를 통해 성능·신뢰성 평가 등 기업지원과 연구개발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산업의 메가트렌드인 자동화·로봇화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산업부의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도국 지원사업에 우리도내 기관이 주관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로서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즈베키스탄 농업기계와 축진과 더불어 도내 농기계업체의 중앙아시아 수출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전북이 농생명산업의 메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안전한 사회위해 지혜 모아야

특조위, 참사 2주기 추모식 비공개 진행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은 15일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와 가족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공감과 필요"를 강조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자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식'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맹목적인 이윤추구와 국가의 구조실패로 인해 발생한 비극"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참사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실을 부인하려는 이들도 있다. 또 '이젠 그만 하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무엇이고 구조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진실을 찾는 일에 한층 매진해야 한다"며 "우리가 이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때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피해자들이 수감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도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한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라"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관피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참사의 아픔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공동체 일원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무다. 이러한 인식 확산을 통해 사회적 치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회복해라"고 설명했다.

(박용주기자)

권익위, "난치병 자퇴 군 장학금 반납 명령 부당"

난치병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자퇴한 군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해군의 명령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 대학교 해군 학과에 군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가 '크론병'이 발병해 자퇴한 A씨에게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한 해군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모 대학교 해군학과에 군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한 학기를 마칠 무렵 크론병이 발병,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했다.

해군은 A씨에 대해 "난치병이 생겨 자퇴를 한 것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6월 군 장학생 선발을

취소시킨 뒤 그동안 지급된 장학금 400여만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신체검사서 병력사항을 모두 밝혔고 ▲재학 중에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학업에 지장이 온 것도 없어서 크론병이 있는지조차 몰랐으며 ▲질병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활동을 한 적도 없다는 이유 등을 들며 "장학금 반납 명령은 잘못됐다"며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반납 명령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진수기자)

마지막 사시 1차 합격자 222명 발표

법무부는 15일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 합격자 222명을 발표했다.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토록 한 현행법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사실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결과다.

시험에는 모두 3794명이 응시해 경쟁률은 17.09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3880명 중 347명이 합격한 11.32대 1, 2014년 9.97대 1 경쟁률보다 높은 수치다.

최저 합격점은 279.44점, 평균은 79.94점이다. 지난해 최저 합격점 282.91점, 평균 80.83점에 비해 모두 낮아졌다.

법무부는 "올해와 내년 2차시험의 적정 경쟁률 유지, 선발예정인원 감축에 따른 내년도 응시자들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용주기자)

전주, 한눈에 반하다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문화의도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